

##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정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hgjeong@kiep.go.kr, Tel: 044-414-1127)

**최보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팀장(bychoi@kiep.go.kr, Tel: 044-414-1185)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brlee@kiep.go.kr, Tel: 044-414-1045)

**손원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연구원(wjson@kiep.go.kr, Tel: 044-414-1287)

## 차 례

1. 머리말
2.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
3.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결과
4.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 주요 내용

- ▶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였음.
  - 역대 협력방안으로 ① 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 ②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③ 경제 ④ 지속가능개발 ⑤ 기타 관련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 국제현안에 대해서는 ① 동북아 평화 및 ②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음.
- ▶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3국 정상의 합의를 통해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RCEP 추진과정에서 3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RCEP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회원국들간 긴밀한 생산네트워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교역비중 측면에서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RCEP 체결이 중요하나 회원국들간 양극화 현상으로 협상 진전과 개방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을 더욱더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한·중·일 정상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3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중·일 국민들이 하나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상임.
  - 3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내수를 촉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 구매를 위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국내 접근성을 높여 국내시장의 경쟁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중국 도소매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의 중국시장 접근성 강화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됨.
- ▶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3국 협력사무국(TC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EU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여 3국의 협력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1. 머리말

■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sup>1)</sup>

-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지역 및 국제현안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
- 이번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이후 중단되었던 정상회의를 필두로 3국간 정부채널을 복원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짐.
  - 2015년 11월 제6차 정상회의 이후 의장국인 일본은 역내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 바 있으나 2016년 중·일 영토분쟁 및 우리나라 탄핵정국을 포함한 각국 국내정치 스케줄 등의 이유로 연기되어왔음.
  - 2018년 상반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동북아 역내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커져 5월 9일 개최됨.

■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공동 기자회견과 양자회담, 비즈니스 서밋 행사 등을 함께 진행

-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협력의 제도화, 경제, 인적교류, 문화, 정무,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에 걸친 폭넓은 분야에서의 3국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3국 정상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할 것임을 강조함.
- 정상회의 이후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의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한·중·일 3국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여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독려함.
- 3국 정상은 연이어 양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북한문제를 비롯한 양자 협력방안을 모색함.

■ 2년 6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살리고 3국간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본고는 지금까지 채택된 문서를 토대로 3국의 협력성적을 짚어보고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3국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2010년 제3차 정상회의부터 회의 명칭을 ‘의장국·차기 의장국·차차기 의장국’의 순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중·일’로 표기를 통일하고자 함. 정형곤, 노유연(201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17호, 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

### 가. 한·중·일 정부 차원 협력 제도화

-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비공식적인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 개최하기 시작함.
  -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우선협력분야로 무역·투자, 정보통신, 환경보호, 인적개발, 문화,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 청소년교류 등 11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음.
  
- 2008년부터는 3국간 협력노력을 진전시키고 3국간 협의체열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sup>2)</sup> 아세안+3 체제와 별도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며 정부간 협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
  - 3국 정상회의 개최지 및 의장국은 일본 → 중국 → 한국의 순으로 합의
  -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단 2차례의 정상회의만이 성사됨.
  
- 한·중·일 정상회의를 필두로 3국은 정치, 경제, 사회, 지속가능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를 논하는 21개 장관급회의와 47개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개최·운영하고 있음(표 1 참고).<sup>3)</sup>
  - 첫 번째 3국 정상회담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3국 장관급회의는 감사원장회의, 환경장관회의 두 개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2018년 현재 장관급회의가 21개로 확대된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의 경제·사회 전반의 연계성이 증진됨에 따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기인함.
  - 21개의 한·중·일 장관급회의 중 정상회의와 의장국, 개최시기 등이 연계되어 개최되는 장관급회의는 외교장관회의와 경제통상장관회의임.<sup>4)</sup>

2) "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2008.12.13).

3) 외교부(2017), 『2016 한·일·중 협력 개황』, pp. 12~13.

4)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외교장관회의와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정상회의 개최 1~2개월 이전 개최되었던 반면, 이번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는 별도의 외교장관회의와 경제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

표 1. 한·중·일 정부협약체널

대분류	소분류	장관급회의	고위급/국장급 회의	
전반		정상회의		
정무	전반	외교장관회의('07)	외교부 고위급(차관보)회의; 대테러협의회 사이버정책협의회; 아시아정책대회(고위급) 중남미국장회의; 아프리카정책대회(국장급)	
	재난방지	재난관리기관장회의('09) 지진협력정상회의('04)	재난관리국장급회의	
	치안		경찰협력회의	
경제	경제전반	경제통상장관회의('02) 관세청장회의('07) 특허청장회의('01)	FTA협상 표준협약체(국장급) 환경해경제기술교류회의(국장급)	
	물류	교통물류장관회의('06; 격년)	동북아항만국장회의 교통물류국장급회의(교통물류과장급회 별도개최)	
	금융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02) 중앙은행총재회의	-	
	과학기술	과학기술장관회의('07)	과학기술국장급회의	
	ICT	정보통신장관회의('02; 중단)	IT국장급회의	
	지속가능 성장	환경	환경장관회의('99)	환경과학원장회의; 북극협력대화 항사대응국장급회의; 환경장관준비국장급회의
		보건	보건장관회의('07)	고령화회담; 의약품국장급회의
		에너지	수자원장관회의('12)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농수산업	농업장관회의('12)	수산연구기관장회의; 삼림협력장급회의
	사회 문화	문화	문화장관회의('07)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국립박물관장회의
관광		관광장관회의('06)		
스포츠		스포츠장관회의('16)		
교육		교육장관회의('16)	고등교육교류전문가위원회	
행정		인사장관회의('05) 감사원장회의('98)	인사국장회의; 외교연수원장회의 (감사실무협력회의)	
인적교류		-	3자협력포럼; 싱크탱크네트워크(NTCT)	

주: 1. ( ) 숫자는 제1차 장관급회의 개최연도를 지칭함.

2.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ICT장관회의는 2011년 이후 개최된 바는 없으나 제6차 정상회의에서 ICT 장관회의 개설에 합의한 바 있음.

자료: 외교부(2017), 『2016 한·일·중 협력 개황』, pp. 12~13; 3국협력사무국 홈페이지(<http://www.tcs-asia.org/en/data/mechanism.php>, 검색일: 2018. 5. 11)를 토대로 저자 정리.

## 나. 제1차~6차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내용

■ 2008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제6차 정상회담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총 19건의 문서를 채택하였음(표 2 참고).

- 3국 정상은 의장국의 주도 아래 3국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결과 및 3국 장관급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 혹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무, 경제, 사회, 지속가능개발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력사항은 별도의 문서에 담아 채택하였음.
- 본고에서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서 가운데 협력 제도화와 경제, 지속가능개발 관련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표 2. 한·중·일 정상회의 채택문서

정상회의	채택문서
제1차(200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li> <li>•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li> <li>•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li> </ul>
제2차(2009)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li> <li>•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li> </ul>
제3차(2010)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협력 비전 2020</li> <li>•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li> <li>• 표준협력 공동선언</li> <li>• 과학혁신 강화 공동선언</li> </ul>
제4차(2011)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선언문</li> <li>• 재난관리 협력문서</li> <li>• 원자력안전 협력문서</li> <li>•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협력문서</li> </ul>
제5차(2012)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선언문</li> <li>• 농업 협력문서</li> <li>•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야생생물보호, 사막화 방지협력문서</li> <li>• 실적보고서(2008~11년)</li> </ul>
제6차(2015)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li> <li>• 경제교역협력을 위한 공동선언</li> </ul>

자료: 3국 협력사무국 홈페이지([http://tcs-asia.org/bbs/board.php?bo\\_table=catg&sca=84](http://tcs-asia.org/bbs/board.php?bo_table=catg&sca=84), 검색일: 2018. 5. 11).

■ 2008년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3국 협의체 운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음.

-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은 정무(4개 분야), 경제(8개 분야),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6개 분야), 사회문화(7개 분야), 국제사회협력(6개 분야) 부문을 포함한 31개 분야에서의 협력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무부문에는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와 외교고위급회의, 3국사이버협력사무국(이후 3국 협력사무국으로 발전) 운영 관련 합의내용이 포함됨.
- 경제부문에는 3국 FTA 공동연구, 3국투자협정, 비즈니스환경, 에너지, 물류(물류장관회의), 통관(관세청장회의), 산업협력 협의메커니즘, 금융 등 분야별 협력관련 내용이 포함됨.
-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부문에는 역내 대기오염감축을 위한 협력강화, 과학기술, ICT 외 4개 분야별 협력 내용이 포함됨.

■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10주년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3국이 △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 상호호혜적 협력심화 △ 인적교류 확대 △ 아시아 평화, 안정과 번영 촉진 △ 국제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합의함.

- 3국 정상은 추가적으로 수자원 및 농업 협의체 구축, 과학기술 협력 등 3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담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이때부터 3국은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중국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을 개최하기 시작<sup>5)</sup>
- 비즈니스 서밋은 주관기관뿐 아니라 산업별 협회 대표단,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3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5)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측 주관기관이 전경련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됨.

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회의로 논의결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3국 정상에게 전달됨.<sup>6)</sup>

■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하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에 합의하는 한편 3국간 협의채널 운영 및 관리 지원 기능을 하는 “3국협력사무국” 신설에 합의하였음.

- 「3국 협력 Vision 2020」은 협력제도화(6개 분야), 경제(11개 분야),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7개 분야), 인적문화교류(7개 분야), 국제사회협력(10개 분야) 부문을 포함한 41개 분야에서의 협력계획을 담고 있음.
  - 협력제도화 부문에는 정부간 협의체 목표, 3국협력사무국, 지방정부간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경제부문에는 3국 FTA 공동연구, 3국투자협정, 비즈니스환경, 물류(물류장관회의), 통관(관세청장회의), 산업분야 정책공조(산업, 에너지, 지재권, 농수산업, ICT, 문화산업 등), 금융, 과학혁신, 표준화 등 분야별 협력관련 내용이 포함됨.
  - 특히 경제부문 합의내용 가운데 과학혁신과 표준 협력강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는 별도 공동성명에 담아 채택함으로써 강조함.
  - 그밖에 주요 합의의제에는 황사문제(DSS: Dust and Sandstorm)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방안·방지기술·역량 구축 등에서 3국간 협력강화, 순환적 경제모델 구축방안 모색, 인적교류 확대방안 모색,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있었음.

■ 2011년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협력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사안들을 확인하고, 「3국 협력 Vision 2020」의 협력사업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됨.<sup>7)</sup>

- 제4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23개의 협력의제가 포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협력문서와 함께 개최 2개월 전 발생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3국 협력 실천과제가 담긴 세 개의 문서를 별도로 채택하였음.

■ 2012년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3국 투자보호협정체결 및 한·중·일 FTA의 연내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음.

- 「공동선언문」에는 정무부문(6개 분야), 경제통상협력(11개 분야), 지속가능개발(14개 분야), 사회·인적교류·문화(6개 분야), 국제사회(8개 분야) 등 45개 분야에서의 협력내용이 포함됨.
  - 이 가운데 경제부문에는 경제통상장관회의 협력의제, 3국 FTA 공동연구, 3국투자협정, 물류(물류장관회의), 관세협력 내 지재권보호 및 AEO 협력증진, ICT, SPS와 TBT 이행, 위생검역,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협력의제 내용이 포함됨.
  - 지속가능개발부문에는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등의 협력의제가, 국제사회부문에는 역내 경제협의체 논의관련 협력내용이 포함됨.

6) 이창재 외(2012),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연구보고서 12-13, p. 1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정형곤, 노유연(201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17호, p.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56개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방안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과 함께 「경제교역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별도로 채택하여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6개 분야), 경제·사회(18개 분야), 지속가능개발(7개 분야), 인적문화교류(7개 분야), 국제사회협력(10개 분야) 부문을 포함한 48개 분야에서의 협력계획을 담고 있음.
- 경제부문에서는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개시한 ‘3국간 공급사슬 연결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프로젝트, 한·중·일 FTA 및 투자 촉진, 금융, ICT장관회의 개최합의, 표준화, 물류, 관세, 농업 및 기타분야(고용·노동, 식품안전, 지적재산권)에 대한 3국의 협력강화 내용이 포함됨.
- 2008년 행동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제6차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신규 혹은 구체화된 경제협력의제에는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고부가가치 신산업(바이오, 보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혁신정책 공조, LNG, SME, 제4국시장 진출, 역내 항공운송시장 구축 등에 대한 협력방안이 포함.
- 「경제교역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도 포함된 3국 경제교역 협력의제에 대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및 RCEP 협상의 선도적 역할에 합의, △3국간 공급사슬연계(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고위급회의 신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담긴 ‘3국간 공급사슬 연결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연구 결과 확인 △지재산권 협력 강화 관련 내용이 있음.
- 또한 △제4국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공동진출 방안 모색 △향후 3국 내 개최예정인 올림픽 관련 협력 △E-commerce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및 역내 디지털시장 구축의 상호 호혜성 인정 △표준협의를 통해 실버산업(senior product), 보건, 환경과 같은 신산업에서의 협력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처럼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당면한 현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제에 대해 3국간 협력방안을 논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음(표 3 참고).

-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의제를 살펴보았을 때 한·중·일 FTA, 물류, 관세, 환경, 금융 등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음.
-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의제가 LNG분야의 협력으로 구체화되었고, 표준화, 보건, 신산업, 전자상거래, 혁신정책 공조 등과 같이 새롭게 대두된 현안에 따라 3국간 협력의제가 점차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음.

표 3.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경제협력의제 관련 합의사항 정리

	2008년(제1차)	2010년(제3차)	2012(제5차)	2015((제6차)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회의 및 주요 장관회의 정례화</li> <li>• 사이버협력사무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협약체 독려</li> <li>• 3국협력사무국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협약체 독려</li> <li>• 3국협력기금 창설</li> </ul>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FTA 공동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FTA 공동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FTA 공동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FTA 및 투자촉진</li> </ul>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투자협정 협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투자협정 협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투자협정 협상</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역투자환경 조성</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시장의 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협력</li> </ul>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장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장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장관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li> <li>• 역내항공운송시장</li> </ul>

표 3. 계속

	2008년(제1차)	2010년(제3차)	2012(제5차)	2015((제6차)
관세	• 관세	• 관세	• 관세(IPR, AEO)	• 관세(무역원활화)
산업	• 산업협력 협의를메커니즘	• 산업분야 정책공조 에너지, IPR, 농수산업, ICT문화산업 등	• SPS, TBT요건준수 • 감독검역부문 협력	• 고용·노동; 식품안전; 지적권
금융	• 아세안+3 금융협력	• 아세안+3 금융협력	• 아세안+3 금융협력 • 3국 내 양자통화스왑	• 아세안+3 금융협력
환경	• 대기오염감축협력 • 해양쓰레기 • 조류독감협력	• 황사(DSS)대응협력 • E-Waste • 순환경제모형구축	• 대기오염감축협력 • 순환경제모형구축 • 녹색경제성장	• 대기오염 • 순환경제모형 • E-Waste •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 과학기술(장관회의)	• 과학혁신	• 과학기술	• 과학혁신(장관회의)
ICT	• ICT	(산업 전반에 포함)	• ICT	• ICT장관회의 정례화
표준화		• 표준화		• 표준화
농업		(산업 전반에 포함)	• 농업	• 농업
보건			• 보건(장관회의)	• 정보교환기술협력
신산업				• 고부가가치 신산업 (바이오, 보건, 전자 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역내 디지 탈 단일시장)
제4국시장				• 제4국시장
SME				• SME
혁신정책				• 협의체 신설

자료: "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2008. 12. 13);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2010. 5. 29); "Joint 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Trilateral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2012. 5. 13); "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2015. 11. 1)를 토대로 저자 정리.

### 3.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결과

■ 3국 정상은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선언문」과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함.

- 「공동선언문」은 크게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에서는 3국 협력의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성과 함께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강조
  - 지금까지의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3국협력사무국이 관련 역량을 구축하고 3국협력메커니즘에 참여해온 점을 지지하며, 3국협력기금(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 본문은 크게 △3국 협력과 △지역 및 국제현안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4 참고).
  - 3국 협력 부분에서는 ① 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 ②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③ 경제, ④ 지속가능개발, ⑤ 기타 관련 세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및 국제현안 부분에서는 ① 동북아 평화 및 ②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4.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주제	주요 내용
3국 협력	3국 협력 제도화 및 정례화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 외교부간 협의체 정례화 △3국 영사 협의체 제도화 검토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올림픽 관련 협력 강화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 개최 △캠퍼스 아시아 사업 개최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 제공 △미래지도자포럼 활성화 △3국 문화서클 프로그램 활성화
	경제 협력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관련 협력 확대 △세관 및 운송 분야 협력 강화 △특히 관련 협력 강화 △LNG 협력 양해각서 체결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 관련 ICT 분야 교류 확대 △사이버 안보 관련 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을 통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
	지속가능성장	△자원 효율성 추진 △역내 해양쓰레기 및 대기오염 방지 △농업, 임업, 생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요성 강조 △원자력 안전 관련 협력 지속 △보편적 의료보장, 검역 관련 협력 강화 △'3국 고령화 정책 대화' 개최
	기타	△'재난관리 협력'을 토대로 협력 강화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3+1 협의체 구상
지역 및 국제 현안	동북아 평화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북·일 간의 조속한 납치자 문제 해결 희망
	동아시아지역 협력	△동아시아 역내 협의체 내에서의 3국간 공조 △동아시아비전그룹의 후속조치 이행

자료: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Joint Declaration of the Seventh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8. 5. 9)을 토대로 정리.

## 가. 3국 협력의 제도화 및 정례화

■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3국 정상회의와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함.

-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관리 분야의 3국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3국이 정책 조정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이 밖에도 새롭게 '3국 영사 협의체'를 설립하여 영사 분야에서도 장기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나. 스포츠·문화·인적 교류

■ 3국 정상은 인적교류 목표를 2020년까지 3천만 명 이상으로 하여 관광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동경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비롯한 청년 교류 사업과,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 '미래지도자포럼', '3국 문화서클 프로그램'과 같은 인적·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세부 협력방안으로 제시함.

## 다. 경제 협력

- [무역·통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해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표준화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도 확대할 것을 선언함.
  - 한·중·일 FTA는 3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무역의 자유화 및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관세] 3국의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해 2017년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정보 및 경험 교환을 약속하는 등 세관 및 운송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17년 제6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 및 교역 원활화 △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고려한 '액션플랜' 개정 합의 △대테러 관련 협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sup>8)</sup>
- [특허] 역내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3국간 특허청장회의'를 비롯하여 3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2017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특허청장회의에서는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발전과 3국의 지재산 협력 확립을 위해 특허청 간의 협력 범위와 형태를 규정한 '협력체계' 문서를 채택한 바 있음.<sup>9)</sup>
- [에너지·인프라]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적 연계 강화를 목표로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대한 3국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함.
  -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3국간 액화천연가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과학·ICT 기술 산업] 3국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부문과 사이버부문에서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관련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을 포함한 정보통신(ICT)분야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3국 ICT 장관 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정보, 인적자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ICT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 대테러 조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8) 관세청(2017), 「제6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보도자료. (11월 30일)

9) 특허청(2017), 「한·중·일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협력 강화하기로」, 보도자료. (12월 7일)

- ICT 안보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필수적이고 적용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불안정성에 대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SEAN+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통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첫 CMIM 정기검토 진행, IMF와의 협력 강화, AMRO의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 획득,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자본증자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라. 지속가능성장

- [환경·원자력]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다차원적 협력이 필요하며 순환적 경제, 자원 효율성 추진, 역내 해양쓰레기,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에 함께 대응해나가고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를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함.
  - 3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파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농업, 임업, 생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함.
- [보건·고령화] 한·중·일 정상은 3국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문제와,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비전염성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함.
  - 보편적 의료보장, 검역, 공공의료, 원격의료산업과 같은 보건분야 협력과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3국 고령화 정책 대화’ 개최, 보조기기분야의 자원 교류, 장애인들의 인터넷 경제 참여방안 모색 등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제시함.

## 마. 기타 및 지역·국제 현안

- [재난] 과거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과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재난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3국의 지속적인 노력 강조
- [3+1 협력구조] 역내외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3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3자간 대화와 협의 강화를 포함한 3+1 협력구조를 모색하기로 합의함.
  - 중국 측은 3국이 ‘한·중·일 + X’의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역량 협력 △빈곤 해소 △재해 관리 △에너지

지 절약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4국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sup>10)</sup>

■ [동북아 평화 및 동아시아지역 협력] 한·중·일 정상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일간의 조속한 납치자 문제 해결을 희망하며 3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

- 또한 ASEAN+3을 비롯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G20 등의 국제 협의체에서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조할 것을 약속함.
-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설치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의 후속조치 이행에 주목함.

## 4. 평가 및 향후 협력방향

■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동안 단절되었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등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지하고, 갈등보다는 현존하는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함.

-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하여 발표한 협력의 제도화와 3국협력기금에 대한 공동 인식은 향후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3국 협력과 지역 국제현안 등 일부는 과거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언급한 수준이나, 회담의 정례화·제도화를 언급하고 있고, 각 현안들에 대해서 비교적 세부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 향후 3국 협력에서 진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임.

■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간 '협력을 위한 인식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 과거사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하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함.

■ 먼저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합의는 동북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서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아세안+6개국으로 추진 중인 RCEP의 신속한 타결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비중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생산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RCEP 16개 회원국간

10) "Premier Li proposes 'China-Japan-ROK+X' cooperation mode"(2018), *Xinhua*. (May 9). [http://english.gov.cn/premier/news/2018/05/09/content\\_281476140467928.htm](http://english.gov.cn/premier/news/2018/05/09/content_281476140467928.htm).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이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RCEP의 협상 진전과 개방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16개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와 발전 수준의 차이가 무역자유화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RCEP 16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이미 양자간 FTA에서도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왔으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아직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임.
- 향후 RCEP에서 관건은 동아시아 16개 회원국간 양극화되어 있는 FTA 체결 수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여 가급적 높은 수준의 FTA로 이끌어 내느냐 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RCEP 회원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
-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을 더욱더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RCEP과 한·중·일 FTA를 공동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합의는 현재 뚜렷한 중심점이 없는 RCEP 추진과정에서도 3국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함.

■ 한·중·일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 협상의 순항을 위해서도 중요함. 한·중·일 FTA 체결 역시 3국 모두의 GDP 성장과 후생증가를 기대케 하나 13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임.

- 한·중·일 FTA 협상은 3국 산업구조의 유사성, 지역적 근접성, 민감산업에 대한 우려 등 FTA 체결시 그 파급 효과 때문에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접근이 쉬운 분야부터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3국간 FTA를 조기에 체결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FTA는 경제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의 안보 문제등도 같이 해결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RCEP에서의 역할도 확대할 수 있음.

■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을 재확인한 것은 3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중·일 국민들이 하나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상임.

- 이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구매를 위한 일본인과 중국인의 국내 접근성을 높여 국내 시장의 경쟁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중국 도소매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의 중국시장 접근성 강화는 특히 우리 유망 중소기업들에게도 많은 사업기회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7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정부간 협력체를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실제 현재까지 3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장관급 협의체 21개를 포함한 68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sup>11)</sup> 또한 3국간 합의는 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협의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임.
- 이번 3국 정상은 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 및 관심이 필요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역량강화에 합의했는데, 3국간 경제협력 문제를 보다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EU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여 3국의 협력사업에 대한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함으로써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한·중·일 협력사업을 보다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3국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보다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함.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이 3국 협력사무국에 보장되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한·중·일 협력이 가능해질 것임. 3국 협력사무국도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3국 협력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한·중·일 통합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함.
- 셋째,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넷째,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매년 순조롭게 개최되어 각종 협력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3국협력사무국의 탈정치화가 필요함.
- 다섯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사회문화체육 교류를 위한 협력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바, 현 상황에서 가장 거부감이 없는 분야가 사회문화 체육교류임. 캠퍼스아시아사업을 비롯한 청년교류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동계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3국간 문화체육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11) 외교부(2017), 『2016 한·일·중 협력 개황』, pp. 12~13.

- 여섯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함. 3국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곱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보다 더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간다면 한·중·일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
- 여덟 번째,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한·중·일 정상회의가 단순히 3국간 협력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협력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 **KIEP**